

통일정세분석 2001-07

북한·독일 수교의 배경과
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

2001. 4

김학성 (경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)

< 요약 >

- 2001년 3월 1일 북한과 독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란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격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내·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유발했음.
 -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(EU)의 핵심국가이며, 탈냉전시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력 확대를 지향해왔던 바, 북·독 수교는 향후 북한과 유럽국가들의 외교관계 개선 및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.

- 북한은 이념·정치·경제적으로 선린우호관계에 있었던 구동독의 붕괴로 입은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독일통일 직전부터 독일과의 수교를 원했음.
 - 독일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, 대미 및 대남한 관계를 고려하여 한동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,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는 가운데,
 -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회의기간 중 독일총리 쉬뢰더(G. Schröder)가 북한과 수교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함.

- 북한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한반도내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대서방 외교에 중점을 두어왔던 바, 최근 유럽국가들과의 수교가 북한 대

외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음.

- 그럼에도 북한이 과거와 달리 독일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여 수교를 추진한 배경에는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정치적·외교적 위상 활용과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.

○독일은 통일이후 과거 유럽중심의 외교를 탈피하여 세계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바, 독일의 대북정책은 이 맥락에 입각하여 추진됨.

- 대북수교와 관련, 독일의 당면목표는 평양에 주재하는 독일 외교관과 민간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보장이며,
- 중·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임.
-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익확보를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, 중·장기적으로 시장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○북한은 현재 유럽연합(EU)국가들 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수교를 했으며, 두 국가와는 물론이고 EU 공동체와도 수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.

○최근 EU 국가들의 대북 개입정책은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화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,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과정에서 강경화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-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상이한 대북 접근은 전략적 내지 사안별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.

○EU국가들 중에서 특히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목 차

I. 문제 제기	1
II. 북·독 수교의 전개과정	4
III. 북한과 독일의 수교 배경: 양국의 의도 및 목표	8
1. 북한의 의도 및 목표	8
2. 독일의 의도 및 목표	13
IV.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	16
최근 발간자료 안내	22

I. 문제 제기

- 2001년 3월 1일 북한과 독일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란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격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내·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유발했음.
 - 특히 북한은 독일이 제시한 까다로운 수교 조건을 파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금년 초부터 가시화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‘새로운 관점’ 강조와 관련, 향후 북한의 대서방 개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킴.
 - 또한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시화되기 시작한 유럽국가들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.

- 북한은 1955년 ‘주체’의 표방 이후 제3세계 및 서유럽국가를 대상으로 이미 외교다변화를 시도해왔음.
 - 과거 북한의 외교다변화 전략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과 경제적 목적에서 추진된 것으로써 말타(1971년)를 비롯하여 1973년~1975년 덴마크, 스웨덴, 노르웨이, 핀란드, 스위스, 포르투갈 등 유럽국가들과 수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,
 - 냉전시기 북한의 대서방 진출 노력은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인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음.

○ 세계적 탈냉전의 개막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유럽관계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인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지만, 1999년 9월 ‘북·미 베를린 미사일 발사 유예협상’ 타결 이후 외교관계 정상화가 급진전되기 시작함.

- 북한과 이탈리아의 수교(2000년 1월 4일) 이래 동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분위기의 고조와 동년 10월 제3차 ASEM 서울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유럽국가들간 수교 협상이 급증함.

○ 최근 북한과 유럽관계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보다 유럽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.

- 탈냉전시기에 접어들어 유럽국가들은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 외교적·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해온 바,
-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한정부의 요청에 편승하여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추진기회를 확보함.

○ 특히 독일은 유럽연합(EU)의 핵심국가이며, 탈냉전시기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 대한 외교력 확대를 지향해왔던 바, 북·독 수교는 향후 북한과 유럽국가들의 외교관계 개선 및 확대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.

- 따라서 북·독 수교의 배경과 의미 분석을 통해 향후 유럽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.

II. 북·독 수교의 전개과정

○북한은 이념·정치·경제적으로 선린우호관계에 있었던 구동독의 붕괴로 입은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통일독일과의 수교를 원했음.

-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실현되기 직전 북한 외교부 제1부 부장인 강석주가 본(Bonn)을 방문하여 당시 서독정부에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음.

○그러나 독일정부는 북한의 핵개발문제, 대미 및 대남한 관계를 고려하여 정식수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음.

- 대신 동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소속의 이익대표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용인했으며,
- 독일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외교대리기구로 선정하고, 그 산하에 독일 이익대표부를 운용함.
- 그 결과 현재 베를린에는 8명의 북한 외교관, 평양에는 4명의 독일외교관이 상주하고 있음.

○독일통일 이후 북한은 수시로 독일과의 수교의사를 타진했으며, 동시에 소멸된 구동독과 경제관계 회복은 물론이고 통일독일과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.

- 북한은 1991년 1월 24일 대외무역부 부부장 김정우를 대표로 하

는 경제무역대표단을 독일에 파견한 이래 1999년까지 양국간에는 차관급 내지 국장급 수준에서 꾸준한 접촉이 있었음.

-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해서는 강석주가,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김정우가 북한측 주요 접촉 창구로서 독일을 수차례씩 방문함.
- 이외에도 독일외무성과 베를린 북한 이익대표부간 접촉, 그리고 독일연방의원들의 방북이 드물지 않게 이루어져 왔음.

○1990년대 독일과 북한간 공식적 차원에서 몇 가지 외교 및 경제협력의 성과가 있었던 바, 대표적인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.

- 1991년 2월 김정우의 독일방문시 ‘독·조 공동위원회’를 설치하여 경제협력의 기반을 확립
- 1995년 3월 독일과 북한간 구상방식 무역협정 체결 및 ‘북·독 청산무역회사’ 설립
- 동년 8월 북한의 큰물피해에 대해 유럽국가들 중 처음으로 독일의 수재지원 개시
- 1996년 북·독 민간경제협력 추진의 교두보로서 독일 ‘동아시아협회’(OAV) 평양사무소 개소

○이처럼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과 독일의 접근이 가속화되었으나, 당시 한반도내 긴장고조로 인해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은 어려웠음.

-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대두되고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상황에서

독일정부는 한국정부의 의사를 존중했음.

- 특히 1995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전후하여 한국정부는 북한과 독일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경고한 바 있음.

○2000년 초 이탈리아와 북한의 수교를 전후하여 독일 내에서도 북·독 수교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함.

- 동년 4월 백남순 외상은 베를린 방문시 독일 외무차관 폴머(L. Volmer)에게 북·독 수교를 요청하고, 그 대가로 독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.
- 이에 대해 독일 외무성은 수교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공식적 입장을 전달함.
- 그러나 동년 9월 백남순의 베를린 방문시 양국 외상회담과 10월 폴머의 평양방문을 통해 독일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함.

○독일정부의 대북 수교 방침은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ASEM 회의기간 중 독일총리 쉬뢰더(G. Schröder)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됨.

- 특히 10월 20일 ASEM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화해·협력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“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 선언”이 채택된 바,
- 여기서는 회원국들과 북한간의 대화, 교류, 협력 등 관계 개선

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.

-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을 필두로 유럽국가들의 대북 수교 방침이 연쇄적으로 표명됨.

○북한과 독일은 2000년 12월 중순부터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함.

- 2001년 1월 독일정부는 각료회의에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최종적으로 결정함.

○200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수교협상은 예정보다 하루 늦은 3월 1일 최종 합의를 도출한 바, 이는 독일이 제시한 다음 4가지 조건에 대한 조율 탓이었던 것으로 알려짐.

- ① 북한에서 활동하는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,
- ②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지켜볼 자유 보장,
- ③ 북한내 독일기자의 활동편의 제공 및 원칙적으로 독일기자의 입국 허용,
- ④ 북한측과 인권, 지역안보, 군비축소, 대량살상 무기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문제를 망라한 군비관리 논의

○북한은 과격적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.

Ⅲ. 북한과 독일의 수교 배경: 양국의 의도 및 목표

1. 북한의 의도 및 목표

○북한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한반도내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대서방 외교에 중점을 두어왔던 바, 최근 유럽국가들과의 수교가 북한 대외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음.

- 과거 북한의 대서방외교는 미국과 남한의 견제 탓에 1970년대 초반 북유럽 일부국가와 수교하는 등 단지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을 뿐이며,
- 북한의 대외개방을 적극 지원하는 대북포용정책의 추진과 특히 2000년 10월 제3차 ASEM 회의를 계기로 유럽국가들이 수교협상에 적극성을 띠었기 때문임.

○그럼에도 북한이 과거와 달리 독일의 요구를 파격적으로 수용하여 수교를 추진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.

- 첫째, 유럽연합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정치적·외교적 위상 활용
- 둘째, 경제적 필요성

가. 정치·외교적 측면

○북한은 탈냉전기 세계정치무대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

연합(EU)의 외교적 영향력을 감안, EU국가들과의 수교를 바탕으로 대외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 강경정책을 희석시키고자 함.

- 동시에 이를 활용, 북·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대미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됨.

○ 유럽은 미국 및 일본과 달리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정책적 중점 지역으로 매우 적합함.

- 북한은 EU와 1차 정치대화(1998. 12.)를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의 정치대화를 비롯하여 대표단 방문 등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음. (<표 1> 참조)

○ 북한은 독일이 EU에서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, 독일을 대유럽외교의 교두보로 간주하고 있음.

- 북한은 베를린에 조선민항의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며,
- 베를린 주재 이익대표부는 유럽 각국에 국제기구 요원 등으로 파견되어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음.
- 이는 북한이 베를린을 미국과의 협상 장소로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치 않음.

○ 북한은 향후 EU와의 수교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독

일과의 수교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했을 것임.

- 따라서 독일이 제시한 수교조건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임.

<표 1> 북한과 유럽연합 관계 개선의 진전상황

사건	일시 및 장소	주요 내용
북한-EU 제1차 정치대화	1998.12.2 (브뤼셀)	핵문제, 4자회담, 남북관계, KEDO 문제, 인권문제, 대북식량지원 등(국장급 실무대화)
EU의회 대표단 방북	1998.12.7-12	핵·미사일 의혹해소, KEDO 문제, 대북 식량지원, 한반도 긴장완화, 고위급 대화 지속(벨기에 전 총리와 김영남의 고위급 대화)
EU 집행위원회 대표단 방북	1999.1.22-25	식량지원 실태조사, 농업구조개선방안, 핵·미사일 문제, 인권문제 (국장급 실무대화)
북한-EU 제2차 정치대화	1999.11.24 (브뤼셀)	식량난, 인권, 한반도 안보상황,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유지, 상호연락사무소 설치, 대북원조 확대
북한 대 EU 수교제의	2000.9.21	북한 외무상 EU 회원국 중 미수교국에 수교제의 서한 발송
EU의회 대표단 방북	2000.10.31-11.4	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등 종래 기본입장 전달, 대북지원실태 파악
북한-EU 제3차 정치대화	2000.11.25-28 (평양)	인권개선,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수출자제, 한반도 긴장완화, 경제지원확대
EU 집행위원회 대표단 방북	2001.2.6-20	경제협력(농업·에너지분야 지원)을 위한 기초조사
EU 대표단 방북 예정	2001. 5월 중	EU대표단(의장국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 인솔) 남북한 동시방문(3.23/24. EU이사회 결정); 한반도 평화, EU와 북한 수교 문제 등 논의예정

나. 경제적 측면

- 북한은 과거부터 구동독과 긴밀한 경제교류·협력을 유지해왔던 바, 통일이후 독일의 경제교류·협력 재개 및 활성화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.
 - 현재 북한의 에너지부문과 철도교통부문은 아직도 구동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바, 남포 항만시설을 비롯, 각종 기계류, 열발전소 등이 대표적 사례임.
 - 또한 1999년 초 북한은 구동독 철도차량을 수입하여 도시와 근거리 지방간의 철로 교통에 투입한 바 있음.
 - 이외에도 북한은 특히 기계류 및 화학부분에서 독일의 투자 및 과학기술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.

- 북한의 입장에서 독일 및 유럽국가들과의 경제교류·협력은 미국 및 일본과 달리 민감한 정치적 조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임.
 - EU의 KEDO 이사국 참여 및 분담금 지불과 유럽국가들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적게 가짐.
 - 따라서 북한은 대서방 경제교류·협력 중 EU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를 원함.
 - 북한은 특히 EU 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독일의 경제적 위상을

고려, 독일과의 경제교류·협력 확대에 주력함.

○1990년대 북한과 독일의 경제관계는 ‘구상방식 무역협정’과 ‘동아시아협회의 평양사무소’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보여 왔음.

- 1990년대 중반 독일은 북한의 6대 교역국이었으나, 후반에 들어와서는 중국, 일본, 한국에 이어 4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, 총 교역량은 약 1억8백만 DM(1998년)에 달함.
- 현재 북한에 진출한 대표적 독일기업으로는 시멘트공장(Klöcker Humboldt Deutz), 화학부문(Helm AG), 섬유부문(Kaufhof, Steilmann, Boss 등), 석재 및 광업부문(Wehrhan), 여행사(Ikarus) 등이 있음.
- 2000년 10월에는 ‘북한·독일 기술 및 과학센터’가 평양에 설립됨.

○북한이 독일과의 수교를 서둔 배경에는 최근 독일의 인도적 지원 단체(구조의사회: Cap Anamur)가 제기한 독일산 소 20만 마리의 북한지원 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.

- 독일정부는 광우병 여파로 도축되는 독일산 소 지원과 관련, 도축, 포장, 운송 등을 위한 비용조달문제를 들어 실행을 미루어 왔으나,
- 최근(4.4.) 내각회의에서 방북조사단의 결과보고를 근거로 금년 상반기 중 3만톤을 대외개발원조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함.

2. 독일의 의도 및 목표

- 독일은 통일이후 과거 유럽중심의 외교를 탈피하여 세계외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바, 이 맥락에서 1993년 10월 '아시아 정책 구상'을 발표하고 1994년 1월에는 10개항의 실행계획을 설정함.
 - 이후 독일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교적 중점을 '아태지역의 경제적 도전에 대응,' '평화보장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,' '자유주의적 경제교류, 환경문제, 인권 등의 가치 확산' 등에 둠.
 - 이를 위해 독일은 아시아 지역의 현대화와 발전에 기여하되,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돈독한 양자관계를 확립하는 데 치중함.

가. 정치적 측면

- 1998년 쉬뢰더 정부가 들어선 후 독일의 세계 외교정책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, 독일의 대북정책은 아시아 정책구상에 입각하여 전개됨.
- 기본적으로 독일은 북한의 국제적 행위가 모두 악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상당부분 국제적 기준에 대한 무지의 산물로 파악함.
 -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함.

○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독일의 당면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됨.

- 첫째, 평양에 주재하는 독일 외교관과 민간 기업 및 단체대표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보장
- 둘째, 세계평화와 인권보장차원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금지와 북한 인권개선

○북·독수교 직전까지 독일은 서방국가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교관을 파견하고 있었으며, 이익대표부 활동만으로도 외교적 현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바, 자국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구태여 수교까지 할 절박한 이유는 없었음.

- 1990년대 중반이후 독일은 여타 서방국가와 달리 북한측에 자국민들의 자유로운 활동 제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공식·비공식적으로 항의한 바 있음.
- 독일정부는 애초 자국이 제시한 조건을 북한이 수용할 때까지 외교관계 수립을 연기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짐.

나. 경제적 측면

○1990년대 독일과 북한의 교역 및 경제협력이 발전하고 있지만, 그 규모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독일이 단기적으로 북한시장에서 확

실한 경제적 이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음.

- 무엇보다 북한의 인프라, 지불능력, 경제마인드 등은 독일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- 양국간 무역은 소규모 구상무역 형태로 이루어질 뿐이며, 대규모 교역이나 투자는 상담수준에 머물 뿐이며 실현되지 못하는 실정임.

○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독일의 관심은 중·장기적인 것으로써 시장 선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
- 독일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한발 늦은 아·태지역시장에서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 ① 광범한 생산기반 확보, ② 특정분야에서 기술적 주도권 확보, ③ 기술이전 및 교육 준비자세 확보, ④ 신뢰성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,
- 특히 향후 북한의 개방 및 한반도 통일을 겨냥, 무역 및 대북투자의 발판 구축차원에서 경쟁국보다 먼저 북한시장에 진입하고자 함.

○나아가 독일은 시장 선점을 기반으로 향후 남북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경우, 남한기업과의 대북 공동진출을 기대하고 있음.

- 이 맥락에서 독일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,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.

IV.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 전망

○북한은 독일에 이어 룩셈부르크(3.5), 그리스(3.8)와 수교함으로써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EU 국가들과 수교한 상태임.

(<표2> 참조)

- 프랑스의 경우,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NGO 단체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지만, 대북수교를 준비중에 있으며 머지 않아 수교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됨.
-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에 수교의사를 통보(4.2)하고 ‘공동외교안보정책(CFSP)’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조만간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.
- 특히 금년 5월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인솔하는 EU 고위급 대표단의 서울 및 평양 동시 방문은 EU와 북한 수교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
○EU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북한과 외교적·경제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, <표 1>에서 보듯이 1998년부터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맥락에서 EU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향후 유럽의 대북정책은 EU 회원국 개별차원과 EU 공동체 차원의 두 방향에서 병행·전개될 것임.
- 단,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존재로 인해 EU 국가들이 대북정책을

경쟁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.

<표 2> 북한과 EU 국가들간 수교 현황 (2001년 4월 5일 기준)

국 가 명	수 교 일
덴마크	1973. 5. 21
스웨덴	1973. 5. 25
핀란드	1973. 6. 1
스위스	1974. 12. 17
포르투갈	1975. 4. 15
이탈리아	2000. 1. 4
영국	2000. 12. 12
네델란드	2001. 1. 15
벨기에	2001. 1. 24
스페인	2001. 2. 7
독일	2001. 3. 1
룩셈부르크	2001. 3. 5
그리스	2001. 3. 8
프랑스	미 정(협상중)
아일랜드	미 정
EU	미 정(협상중)

○1995년이래 지금까지 EU가 공동체 차원에서 추진해온 한반도 개입정책들 중 주요성과들을 열거하면,

- 의료, 음료수, 위생시설, 방한복 등의 인도적 지원(총 3천8백만 euro)
- 식량, 비료, 농업협력 등의 지원(총 1억6천8백만 euro)

- KEDO 이사국으로서 핵발전소 건설비 분담(총 7천5백만 euro) 등임.

○ 제3차 ASEM 회의에서 “한반도 평화에 관한 서울선언”이 채택된 이후 EU국가들은 개별 및 공동체 차원에서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원하는 대북 개입정책(engagement policy)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바,

-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연쇄적인 수교가 이루어졌고,
- 경제적으로는 북한수출품의 EU시장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수입쿼터를 상품별로 50~60% 높였으며, 지난 2월에는 북한에 경제협력조사단을 파견하여 시장경제교육, 에너지와 농업분야 개발 등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했음.
- 나아가 2001년 3월 30일 한국과 EU사이에 발효된 “무역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”에도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EU의 지지가 명시됨.

○ 최근 EU 국가들의 대북 개입정책은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화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,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확정과정에서 강경화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-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, EU 국가들은 미국의 NMD 구축의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려는

의지를 보이지만,

-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바, 당분간 경제적·외교적 수단을 통해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음.
- 따라서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,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미국과 유럽국가들간 직접적인 갈등의 증폭 가능성은 매우 낮음.
- 오히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상이한 대북 접근은 전략적 내지 사안별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개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.

○EU국가들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, 북한의 개방 및 현대화 지원,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, 실제 정책추진과정은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.

- 1단계: 북한내 직업교육, 농업 및 에너지 개발 지원, 식량 및 인도적 지원과 분배의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고, 이와 관련하여 EU국가들의 외교관, 상사원, NGO 대표 등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실질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임.
- 2단계: 북한의 경제발전기반 확립 차원에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대외 개방 촉진, 북한 인권개선,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,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에 역점을 둘

것임.

- 3단계: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발전 및 통일에 기여할 것임.

○이 맥락에서 서방 외교관, 상사원, 지원단체 대표들의 북한내 자유로운 활동 보장 여부가 향후 북한과 EU 국가들간 관계 발전 가능성의 일차적 시험대가 될 것임.

- 북·독 수교직후 EU 국가들과 북한간 모든 외교적 대화에서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- 북한이 자유활동을 완벽하게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, 과거와는 다른 정도의 활동보장 가능성은 매우 높음.

○EU국가들 중에서 특히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완화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- 독일은 금년 여름 중에 평양에 주재대사를 파견할 것이며, 북한과의 수교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,
- 6월경에는 남북한의 외교 및 국방실무자 6명씩을 베를린에 초청하여 독일의 통일경험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.
- 그러나 4월 말 독일연방의회 의원대표단의 서울 방문 직후 판문

점을 통해 평양방문을 하려는 계획에 대해 북한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두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.

○이상과 같은 EU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을 감안하면, 한국정부가 대유럽외교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.

- 한국외교는 전통적으로 주변 4강국에 치중해 왔으나, 현재의 동북아 정세 하에서는 우리의 외교력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바,
- 세계화의 추세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승, 대유럽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역량을 제고하는 정책이 요구됨.